

# “합병비율 1대 1.19... 자산 100조, 재무구조 더 견고해질 것”

## SK 이노-E&S 합병 기자회견

에너지 포트폴리오 개선 등 기대  
‘대한민국 경제발전 기여’ 비전 제시  
공동 시너지 TF로 경쟁력 강화 계획

“미래 에너지 사업에서의 확고한 성장 기반을 만들고 세계 일류 에너지 회사로 성장하기 위해 이번 합병을 결정했습니다.”

18일 박상규 SK이노베이션 사장은 18일 SK 서린빌딩에서 열린 SK이노베이션과 SK E&S 합병과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앞서 SK이노베이션과 SK E&S는 전날 각각 이사회를 열고 양사 합병안을 의결한 뒤 합병 비율을 1대 1.1917417로 정했다. 산출 배경은 양사의 기업 가치를 근거로 삼았다.

합병의 의의에 대해서는 ‘원래 하나였던 두 회사가 새로운 도약을 위해 결합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박 사장은 이번 합병에 따른 기대 효과로 ▲양사의 에너지 포트폴리오 개선 ▲SK이노베이션 재무 및 손익구조 안정화 ▲양사의 역량을 결합해 새로운 시너지 창출 3



박상규(왼쪽에서 두번째) SK이노베이션 사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SK이노베이션-SK E&S 합병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가지를 꼽았다.

재무 건전성 향상도 주요 기대요인으로 지목됐다. 합병회사는 자산 100조 원, 매출 90조원 규모의 외형을 갖추는 것은 물론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은 합병 전보다 1조9000억원 늘어난 5조8000억원 수준으로 커져 재무·손익 구조도 강화된다.

박 사장은 “합병으로 SK이노베이션의 재무구조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며 “EBITDA는 기존 대비 약 2조원 상승한 6조원으로 세전이익은 기존 대비 1조5000억원 상승한 2조5000억원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게 된다”고 말했다.

SK E&S와의 합병을 통해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현재와 미래를 모두 아우르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배터리 사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아울러 양사 합병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공동 시너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려나가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일각에서는 SK E&S가 비상장사인 만큼 합병비율 산정 결과에 따라 주주, 재무적투자자 등 이해 관계자의 반발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합병 비율이 비교적 동등하게 책정됐지만 여전히 이해 관계자 설득은 과제로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양사는 SK이노베이션 기존 주주들과 SK E&S의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보유한 사모펀드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의 동의를 받아야 합병에 이를 수 있다. KKR은 약 3조원 규모의 SK E&S 상환전환우선주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사장은 “KKR과 우호적인 분위기를 유지할 것이며 합병 법인에 부담이 되는 것으로 생각 안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건기 SK E&S 재무부부장도 “합

병에 있어 특별한 변수는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K E&S의 내부 조직 구성원들의 불만과 잡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간 실적이 좋았던 SK E&S는 이번 합병으로 인해 성과급 축소, 조직 개편과 인사 이동 등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박 사장은 “합병 특성상 워낙 이해관계자가 많아 일정부분 결정되기 전까지는 주식시장 염두도 있기에 구성원들에게 충분한 설정을 못 준 건 사실”이라며 “다만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구성원들에게 충분히 공감을 얻으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SK그룹은 현재 사업 리밸런싱(구조조정)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박 사장은 “상당 기간은 현재 조직이 시너지를 내고 안정화하는 게 급선무”라며 “SK이노베이션 차원에서 추가적인 변화를 추구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합병 승인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는 다음 달 27일 열린다. 합병 기일은 11월 1일이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 금리 떨어지는데 대출금리 올리라니... 은행들 ‘곤혹’

금융당국, 가계대출 증가 ‘고삐’  
은행권 “주담대·전세대출 대상  
시간두고 금리 추가인상 예정  
수익 늘면 ‘이자 장사’ 비판도”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에 고삐를 죄자 은행들이 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다만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은행채 금리가 하락했음에도 금리를 올려 은행의 이익만 불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은행의 혼합금리형 주담대 금리는 2.85~4.86%로 집계됐다. 지난달 21일 혼합금리형 주담대 금리는 연 2.94~5.70%였다. 약 한 달 새 하단기준 0.09%포인트(p), 상단 기준 0.84%p 내렸다. 혼합금리형은 은

행채 5년물의 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사실상 고정형으로 불린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증가 압박에도 금리가 내렸다는 설명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대출이 불어나는 속도가 너무 빨라 이를 조절하는 차원에서 금리를 올렸는데, 시장금리(은행채 금리)가 내리면서 효과가 상쇄됐다”며 “시간을 두고 주담대, 전세자금대출을 대상으로 금리를 추가 인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이날부터 혼합(고정)·변동형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0.2%p 인상한다. 신한은행은 22일 은행채 3년물·5년물과 연동된 대출 상품의 금리를 0.05%p 올린다. 우리은행은 고정형 주담대 0.15%p, 전세자금대출 0.15%p 인상한다. 하나은행은 아직 인상 계획이 없지만 시장 상황에 따

라 금리 조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주담대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은행 이익만 불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4대은행의 주요 정기예금 최고금리는 연 3.35~3.45%로 집계됐다. 은행권 정기예금 금리에 영향을 주는 은행채 1년물 금리는 17일 기준 연 3.316%로 이달 초(연 3.476%)보다 0.16%p 낮아졌다.

반면 대출금리는 금융당국의 압박에 금리를 추가 인상하는 등 오르는 추세다. 혼합금리형 주담대 준거금리가 되는 은행채 5년물(AAA) 금리는 이날 기준 연 3.323%로 이달 초(3.49%)와 비교해 0.17%p 낮았다. 은행채 금리가 하락해 예금금리가 내려가는 가운데 대출금리를 올리면 예대금리차가 커지면서 은

행의 이자수익이 늘어난다.

시장에서는 3분기 이후 은행의 예대마진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광명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은행의 금리인상으로 대출 성장은 둔화될 것”이라면서도 “가산금리 조정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이 순이자마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난처한 상황이다. 가계대출을 줄이자니 금리인상이 불가피하고, 금리인상을 통해 수익이 늘면 이자장사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금리가 올라가면 은행의 수익이 늘어난다”면서도 “지금은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더 시급하기 때문에 우선 금리인상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윤석열 대통령 과기부장관 후보 유상임 교수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유상임(65·사진)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를 지명했다. 유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과기부 장관이 교체되는 것이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장·차관급 인사 소식을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환경부 장관과 금융위원장을 각각 지명했다. 이번 인선으로 국정 쇄신을 위한 윤석열 정부 3기 내각 구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윤 대통령은 검증이 완료되는 순서대로 타 부처 장관 교체도 단행할 전망이다.

강원 영월 출신인 유상임 후보자는 서울대 요업공학과(무기재료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아이오와주립대 재료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유상임 후보자는 배우 유오성 씨의 둘째 형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의힘 소속인 유상범 국회의원의 형이기도 하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차관급 인사로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태영호(62) 전 국민의힘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김성섭(54) 대통령실 중소벤처비서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 남영기(58) 국정운영실장을 각각 인선했다.

태 신임 사무처장은 북한 외무성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하다가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외교관 출신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서예진 기자 syj@

## “체코 역대 최대규모 투자... 본산지 원전수출 교두보”

안덕근 산업장관 ‘체코 원전’ 브리핑  
내년 3월 최종계약, 2029년 착공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체코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해 “상업용 원전을 최초로 건설한 원전의 본산지 유럽에 원전을 수출하는 교두보가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안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2009년 UAE(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라면서 이같은 의

미를 부여했다.

안 장관은 이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원전 10기 연속운전 등 그동안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원전 생태계 복원에 더욱 분발하겠다”며 “체코 역사상 최대 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주신 체코 정부에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전날 저녁 9시경 체코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 수력원자력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체코 신규원전 사업은 최대 4기 대형 원전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 투자 프로젝트다.

체코 정부에 따르면, 체코 측의 총 예상 사업비는 2기 약 24조원 수준이다. 최종 계약금액은 한수원과 향후 협상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최종 계약이 체결되면 1000MW(메가와트)급 대형 원전 설계부터 구매, 건설, 시운전, 핵연료까지 일괄 공급하게 된다.

내년 3월 최종 계약 체결 후 2029년 착공때까지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고, 첫 호기 시험가동은 2036년이 목표다. 체코 정부는 추가 2호기 건설 계획을 향후 5년 내 검토해 추가 건설 여부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체코 신규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

결정하게 된다. 추가 건설 계획이 나오면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계약 협상을 벌이게 된다. 계약 금액은 이번과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